

SK에너지, 이라크 원유개발 “배제”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계약은 불법적 ... 1월1일부터 원유 수출중단

이라크 정부가 1월1일부터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맺은 SK에너지에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강수를 두면서 앞으로 전개에 주목되고 있다.

SK에너지와 이라크 정부간 이해관계를 넘어 석유개발의 주도권을 놓고 독립적인 권리를 행사하려는 쿠르드 자치 정부와 이라크 정부의 <세 싸움>이 배경이라는 점에서 SK에너지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자신의 승인 없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따로 맺은 유전개발 계약은 불법적이라며 이른바 <양다리>를 걸치려는 외국기업은 앞으로 다른 이라크 지역의 유전개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를 해왔다.

하지만, 단순히 구두 경고에 그치지 않고 SK에너지를 계기로 실제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로 옮겨졌다.

로이터 통신은 1월28일 익명의 이라크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월1일부터 하루 원유 9만배럴을 SK에너지에 수출한다는 계약에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SK에너지는 이라크 국영 석유기업 소모와 6개월 단위로 이라크 남부 바스라항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새 계약이 시작되는 1월1일부로 이라크 정부가 재계약을 거부한 셈이다.

SK에너지가 이라크 원유 수입을 재개하려면 1월31일까지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이라크 정부는 조건을 내걸었다. SK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가 주계약자인 한국컨소시엄에 참여해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의 한 관계자는 “SK에너지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며 “SK에너지는 원유 한 방울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SK에너지측은 유예 기간인 1월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SK에너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어 그저 시간만 끌고 있는 형편”이라며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털어놨다.

AFP 통신도 한국 산업자원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라크 정부가 SK에너지에 석유 수출을 이미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이라크 정부가 SK에너지 뿐만 아니라 SK에너지가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이 아예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유전개발을 파기하라고 요청했다며 범위를 확대했다.

외국 주요 석유기업들은 이라크전 최대의 전리품인 이라크 석유개발에 군침을 흘리면서도 그간 선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쿠르드 자치지역은 원유매장량이 사업성이 있을 정도로 풍부하고 이라크 남부에 비해 정세가 상당히 안정돼 있어 가장 먼저 발을 들일 수 있었지만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의 갈등을 읽고 유전개발 계약을 미루었다.

SK에너지를 제외하면 현재 이라크 석유부, 쿠르드 자치정부 2곳과 모두 계약을 맺은 곳은 UAE 크레센트, 캐나다 Western Oilsand · Heritage Oil, 인디아의 Reliance, 오스트리아의 OMV 등 4곳이다.

따라서 이라크 정부가 SK에너지와 석유 수출 재계약을 거부하고 수출을 중단한 것은 이라크 정부의 메시지가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이 파병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라크 정부의 조치는 비록 파병국의 기업이라도 이라크 정부의 방침을 거스른다면 예외가 없음을 단호하게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30>